

이재명 “尹, 박근혜 능가하는 언론파괴”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주장

국익 중심 실용 외교도 당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사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에 각을 세우는 한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등 민생 쟁거리에 나섰다. 강은 전략을 통해 밀려들고 있는 사법리스크의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사에 대한 세무 조사, 공영방송 민영화 압박,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닫) 중단 같은 언론 탄압이 가히 전방위적”이라며 “유신정권의 동아일보 광고 중단, 전두환 정권의 보도 지침,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가히 능가하는 언론파괴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언

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는 점을 명시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민생경제가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냈던 대중(對中) 수출도 벌써 5달째 급감 중인데 정부의 대중 압박 참여 움직임이 중국과의 교역에 미쳤을, 또는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와 대외 경제 정책 운영에서 이념과 진영을 중심에 두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대원칙에 충실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한노인회 중앙회 김호일 회장 등 임원진을 초청해 정책 협약식을 갖고 “기초연금의 사회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남편과 부인 각각의 기초연금액 중 20%가 줄어든다.

이 대표는 “함께 사는 게 죄도 아닌데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다 보니 문서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얼마나 잔인한 현실인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노인 복지와 관련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노인 일자리를 6만 개나 줄이는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노인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 어려운 환경에서 오히려 줄인다는 것은 비정당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인 일자리 예산을 확보해서 따뜻한 복지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당직을 사퇴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된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김영록 지사, 내년 예산 확보 연일 강행군

여야 지도부·예결위 간사

기재부 예산실장 만나 현안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2023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여야 지도부, 기획재정부 등과 잇따라 면담하는 등 연일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재부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해 5명의 예산심의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무경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을 국회에서 면담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24일에는 성일중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강력 요청했다. 김 지사는 “RE100, 탄소국경세 등이 새로운 무역장

벽으로 등장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발전량은 부족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 확대 보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풍력은 10개 부처에 걸친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인·허가에만 5~6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기 추진을 위해 관련 인·허가의 일괄 처리로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부탁했다.

조강래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인구유입 방안으로 기업도시 내 신규 주택 취득 시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지역의 기업도시는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농어촌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김완섭 예산실장은 “현안사업이 지역 성장동력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YTN 지분 매각 중단 촉구...“언론 탄압해 잘된 정권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전 KDN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31%를 전량을 매각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당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최고위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해서 대대로 잘된 정권이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KBS와 MBC를 탄압해 민영화를 시도했고, 박근혜 정권

도 YTN 지분을 두고 많은 압박을 했다”라며 “이렇게 (언론을) 탄압한 정권은 탄핵까지 갔다”고 비판했다.

회견에 참석한 김희재 의원은 “YTN 지분을 막무가내로 매각한다면 직권남용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한전 KDN이 YTN 지분을 졸속으로 매각하면 이는 한전 KDN에 대한 배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YTN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 지분을 매각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도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교섭단체 5인으로...심상정 “5대 국회개혁법안 발의할 것”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3일 국회의원은 이해충돌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전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 하게 하는 내용 등의 ‘국회개혁 5대 법안’을 제안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국회의 신뢰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 중 최하위로, 국민들의 불신에 응답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며 개혁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밝힌 5대 개혁법안은 윤리국회법, 미래국회법, 책임국회법, 시민국회법, 공정국회법 등이다.

윤리국회법은 국회의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해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미래국회법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특별위원회를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고, 책임국회법은 국회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장·부의장이 되고 자하는 이는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고 후보가 1명일 경우 무투표 당선되게 한다는 게 골자다.

시민국회법은 국민동의 청원의 공청회 개최 의무화 및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등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도모한다는 조항, 공정국회법은 교섭단체 요건을 20석 이상에서 5석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김희재, 화학 노동자 유급 사위시간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시울) 국회의원은 22일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에게 유급 사위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표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설로 오염물 세척을 위한 목욕(샤워) 시설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작업 중 폭발성·인화성 또는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였음에도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현재 휴게시간으로서 노동시간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노동자가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4시간 이상 수행할 경우 화학물질 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15분의 유급 목욕·세척 시간이 부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사위시간은 필수적”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급 사위시간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주목성 뛰어난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화질 LED플라자 최고화질

-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광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총장로 입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최적의 장소
-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토지 판매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692(호천 1지구)
대지 683.4㎡ (207평)

- 근린생활시설용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2면 도로접(중로1류, 소로2류)
- 5층 건물 신축 가능(대형식당, 스크린 골프장, 커피숍 등 다양한 상가와 1주택 건축 가능)

매매가 : 18억 4천만원

010 - 3605 - 8564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